

심리학을 활용한 공공정책의 개발과 적용 방안

박 영 옥¹⁾

박 상 희[†]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가 현실 속에서의 문제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심리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적용되는 일은 아직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행동경제학이 사회 문제 해결에 이용되는 실태를 보는 것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에 있어 많은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며, 공공정책의 실효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심리학을 사회 문제 해결, 특히 공공정책에 적용할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을 포함하는 행동과학이 최근 10여 년 간 선진국에서 공공정책의 형성에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개관한 뒤에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이 모두 공공정책에 도입되는 일이 더딘 현실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이 한국 사회의 공공 복리의 증진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고찰하였다. 이 글을 통해 심리학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이들의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응용, 공공정책, 사회 문제, 행정, 행동경제학

1)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E-mail: YeongOckPark@chungbuk.ac.kr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2864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대로 1 / Tel: 043-261-2192, E-mail: sangheepark@chungbuk.ac.kr

이 글에서는 심리학을 공공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볼 것이다.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Myers & DeWall, 2015)으로서 심리학은 필연적으로 마음과 행동에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심리학 분야에서는 논문을 쓸 때 연구의 현실적 중요성을 논하는 것을 강조하고(예: APA, n.d.) 심사 시에도 현실적 함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예: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19;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3). 이것은 아마도 어떤 연구가 훌륭한 연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기여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쓸모’를 가진 연구여야 한다는 암묵적인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사회심리학자인 Kurt Lewin은 “좋은 이론만큼 실용적인 것은 없다.”(Lewin, 1951)고 하여 이론과 실천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역설하기도 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파급력이 넓은 방법 중 하나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일 것이다. 공공정책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 나아가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들이 하거나 하지 않기로 정하는 일’로 정의된다(Kraft & Furlong, 2018). 따라서 공공정책을 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줄여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간은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하며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겸비한 존재이다. 따라서 그러한 인간에 대하여 심리학에서 밝혀 온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행정학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Sanderson, 2002), 즉 정책에 관한 결정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은 심리학의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과 잘 부합하는 사상이므로 심리학이 공공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할 잠재성이 있음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심리학이 공공정책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어렵다. 상담이나 임상심리학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응용성이 높은 분야를 제외하면 심리학 연구가 직접적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며(Cherry, 2019), 특히 공공정책에 있어서는 심리학의 참여가 미흡한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Amir et al., 2005). 이는 사회과학 학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심리학이 가진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잠재력을 생각해 보면 매우 아쉬운 현상이다. 심리학은 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심리학이 공공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체로 계속 ‘순수’ 과학으로서의 학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최근에 정책에 행동과학을 도입하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심리학보다는 행동경제학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2008년 Thaler와 Sunstein의 『넛지(Nudge)』 책의 발간을 전후해서 여러 국가에서의 성공적인 정책 적용 사례가 주목을 받았으며, 정부, 연구소, 싱크탱크 등의 주체들이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여 활발한 공공정책 개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러한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공공정책에 의 적용에도 확대되어 빈곤, 공중 보건 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 기구나 NGO 등이 적극적으로 행동경제학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이 공공정책의 개발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하게도 한국은 이런 유행에서 좀 비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역시 『넛지』 책이 번역, 발간(2008)된 뒤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일반 대중에게도 그 개념이 많이 알려졌다. 심지어 Thaler(2016)에 따르면 『넛지』가 가장 많이 팔린 나라는 한국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과학의 접근이 공공정책에 활발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부분적이거나 답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행동경제학이 심리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학문이고 (Tversky & Kahneman, 1974) 심리학보다 훨씬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유행처럼 일반인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고 응용 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심리학자들로서는 부러움이 느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의 성공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동시에 행동과학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태도가 수용적이 되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심리학의 공공정책과의 접점을 더 늘려 심리학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심리학의 기여를 늘리는 것은 한국심리학회와 비전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삶의 질 증진과 성숙한 사회 발전에 기여’

에 부합하는 것이며, 그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미션들 중 ‘정책 수립’,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될 것이다. 먼저 심리학이 공공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행동경제학이 최근 1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정책의 형성에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의 역사를 요약한다. 다음으로는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을 비롯한 행동과학적 접근을 공공정책에 적용하는 연구 기관들과 대표적인 정책 개발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에서의 상황을 살펴 보고 한국에서 행동과학이 정책 개발에 잘 도입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정책에 심리학 적용 확대를 위해 어떤 방향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심리학의 공공영역에서의 활용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심리학을 공공정책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활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직접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개관의 범위는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을 포함하는 행동과학 분야의 공공정책 접목 사례들에 한정할 것이다. 이는 공공정책 영역에서 심리학의 활용이 미흡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공공정책과의 접목을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행동경제학의 정책에의 적용의 역사

여기서는 행동경제학이 지난 10여 년 간 세계 각지에서 정책 개발에 어떻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지를 소개한다. 지면 관계상 모든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행동경제학의 공공정책에의 도입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행동경제학은 공공정책에 활용되어 왔으나(예: Madrian & Shea, 2001)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넛지』 책의 발간(Thaler & Sunstein, 2008)이 결정적인 촉매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ehavioral Scientist, 2018).

Thaler와 Sunstein(2008)이 정의하는 ‘넛지’란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의 한 측면으로서 선택지들 중 일부를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책을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이것은 행동을 억지로 막거나 큰 금전적인 보상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한’(설계자가 판단하기에) 쪽으로 자유롭게 택하게 만드는 접근과 전략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인 것이다. 넛지가 공공정책에 새 바람을 일으킨 것은 사람들의 판단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합리성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굳이 높은 비용과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념에 자극을 받아 각국의 정부와 국제 기구에서는 행정에 행동경제학을 도입하는 부서들을 설치하였고, 대학에 소속되었거나 독립된 연구소들도 각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행동경제학적 관점의 자문을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행동과학이 정책에 적용되는 양상이 ‘넛지’라는 관점 하나로 지나치게 단순화 또는 축소된 바가 없지 않지만, ‘넛지’ 개념이 행동과학적 사고의 확산에 미친 순기능적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영국: Behavioural Insights Team(BIT)의 설치와 독립

영국의 BIT(n.d.)는 행동경제학을 정책 개발에 이용하는, 흔히 ‘넛지 유닛’(nudge unit)이라고도 불리는 연구 조직들의 시초이자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BIT는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 나온 넛지 이론을 적용하여 영국 정책 예산을 절약하고 정부 정책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 카메론 총리 내각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래는 영국 정부의 내각에 속해 있던 팀이었으나 독립적인 연구소가 되었다. BIT의 프로젝트는 일자리와 경제, 교육, 범죄, 에너지, 환경, 재정, 건강과 복지, 정부 정책과 서비스, 세금 등 사회문제나 공공정책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 내각, 미국의 앨버커키시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부터 블룸버그재단(Bloomberg Philanthropy), Catch22 같은 비영리 자선단체들과 협력하여 수십 개국에서 7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본사인 런던을 시작으로 맨체스터, 뉴욕, 싱가포르, 시드니, 토론토, 웰링턴 등 세계 곳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미국: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Team(SBST)의 활동

SBST(2017)는 미국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에 행동과학적 분석을 접목하여, 정책의 대상자들이 어려움 없이 주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설립된 팀이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SBST의 의장을 맡는 등 응용행동과학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팀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키고, SBST가 정부 기관에 정책 관련 도움과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역할 책임을 행정명령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저소득층의 학자금 지원부터 안정된 은퇴자금 저축,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 구직자 지원 등 다양한 정부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려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국제기구 산하 연구기관들의 활동 Mind, Behavior, and Development Unit(eMBeD)

eMBeD(n.d.)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월드뱅크 본부의 행동과학팀으로 세계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50개 국에서 70개 이상의 협력기관과 함께 8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기존의 공공정책 설계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관료주의, 기술적 문제, 정책 서비스의 전달 방식 등을 개선하여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동과학을 접목하고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 및 실무자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의 맥락에서 적은 비용으로 사회, 경제적인 측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정책의 개발을 주로 진행해 왔다. 한 예로는 페루의 교육부와 함께 중학생들에게 지능의 가변성을 인식 시킴으로써 학생 한 명당 0.2 달러의 비용으로 약 4개월의 학교 교육과 동등한 성적 향상을 가져온 사례가 있다. 또한 저소득 국가의 국민에게 자기 자본을 증가시켜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 또한 연구소의 중요한 목표로, 탄자니아의 무선 서비스 제공업체와 제휴하여 저소득층 사람들이 모바일 화폐의 사용을 통

해 저축을 더 많이 하도록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2주 내에 최대 11%의 저축액 증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Behavioral Insights(BI)

2013년에 설립된 BI(n.d.)는 정부, NGO 단체, 대학, 기관, 월드뱅크팀들 등 50개국 70개의 파트너와 협력해 왔으며, 현재 65개국에 걸쳐 학습과 믿음, 건강과 웰빙, 재정과 세금, 젠더와 평등 등, 고용, 효과적인 조직운영 등의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행동과학을 공공정책에 적용하려는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공공정책의 실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설립하였고, 2019년에는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공공정책의 수립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toolkit을 제작하였다. 전 세계의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천 회가 넘는 워크숍과 연수를 실시하고 이만 명이 넘는 공무원과 실무자들에게 공공정책과 행동과학의 적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공공정책의 적용 사례들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고 관련 학술출판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블로그 등을 통해 관련 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행동과학을 공공정책에 적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기타 국가에서의 넛지 유닛들의 활동

BIT 등의 활동에 자극받아 다른 국가들에서도 넛지 유닛들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국가 정부 산하 행동과학 연구소 중에 주요한 것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Behavioural Economics

Team of the Australian Government(BETA; n.d.)가 있다. BETA는 행동과학 연구 결과들을 정부 정책의 실행에 접목하기 위해 201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30 건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매년 정부에 2500만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정부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각국의 정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들 중에는 iNudgeyou가 있다. iNudgeyou(n.d.)는 친사회적인 목적으로 행동과학을 활용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된 덴마크 소재의 연구소이다. 덴마크의 공공정책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세계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행동경제학 관련 OECD 보고서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행동과학의 유용성을 알리고, 실질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행동과학적 접근을 활용한 공공정책 개발 현황

위에서 살펴본 초창기 넛지 유닛들의 선구적인 활동의 결과,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한 행동과학의 적용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OECD Behavioral Insights 웹사이트에 따르면(Behavioral Insights, n.d.) 현재 세계 각국에 202개의 연구 조직들에서 행동과학적 접근을 활용한 공공정책 개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 조직들을 종류별로 나눠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 학교 소속 연구소, 국제 기구 소속인 곳, 독립 연구소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조직들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면 역시 행동경제학이 그 주류를 차지

하고 있고 심리학자들이 주축이 된 곳은 드문데, 매우 특이한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이 후술할 Stanford 대학교의 SPARQ 연구소이다. 공공정책에 대한 행동과학 연구 조직들과 개발된 정책들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더 많은 연구소들의 목록과 웹사이트 주소는 표 1 참조).

연구 기관

SPARQ

SPARQ(n.d.)는 행동과학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관련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Stanford 대학 산하의 연구 기관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여러 사회 현상과 문제에 대한 사회심리학의 유용한 연구 결과들이 학술적 자료로만 남지 않고 현실 속에서 활용되게 하기 위해 실무와 연구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심리학자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정보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소의 또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소의 주요 관심 분야는 사법제도, 경제 계층 이동, 교육, 건강이며,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 산하의 기관답게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원생과 학부생에게도 관련 연구와 실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정책에 행동과학을 적용하는 연구를 하는 연구소들은 대부분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하는 데 반해 SPARQ는 사회심리학이 기반이 된 연구소라는 점

표 1. 행동과학적 접근을 통한 공공정책 개발과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해외 연구소들

연구소명	연구소 소개
Behavior Change for Good Initiative (BCFG)	건강, 교육, 저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Pennsylvania 대학교 Wharton 경영대학원 산하 연구소 https://bcfg.wharton.upenn.edu
Behavioural Economics in Action at Rotman (BEAR)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행동경제학을 접목하여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너지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캐나다 Toronto 대학교 Rotman 경영대학원 산하 연구소 http://www.rotman.utoronto.ca/FacultyAndResearch/ResearchCentres/BEAR
Behavioural Insights (BI)	행동과학을 적용한 정책 프로젝트 수행과 정책 사례 보고서 제작, 행동과학 관련 toolkit 등을 제작하여 정책의 실용성을 향상시키려는 공공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는 OECD 산하 연구소 http://www.oecd.org/gov/regulatory-policy/behavioural-insights.htm
Behavioral Insights Group (BIG)	행동과학적 관점을 통해 리더들의 판단과 결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행동과학의 접목에 대한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는 Harvard 대학교 Kennedy 행정대학원의 연구소 https://cpl.hks.harvard.edu/behavioral-insights-group
Behavioural Insights Team (BIT)	전 세계적으로 7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과학의 적용사례와 방법들을 알리고 있는 곳으로서 영국 정부 산하 기관에서 현재 사회적 목적의 비영리기업으로 독립 https://www.bi.team
Behaviour Works Australia (BWA)	행동과학을 응용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여러 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Monash 대학교 산하 연구소 https://www.behaviourworksaustralia.org
ideas42	35개 국에 걸쳐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세계적인 연구소 중 하나로 건강, 재정, 사회 정의, 지속 가능성 등의 큰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와 행동과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소 https://www.ideas42.org
iNudgeyou	친사회적인 목적으로 행동과학을 활용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공공정책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으며 행동과학의 공공정책 적용에 대한 OECD 보고서를 출판한 덴마크 소재의 연구소 https://inudgeyou.com/en/frontpage
Mind, Behavior, and Development Unit (eMBeD)	전 세계 65개국에서 건강과 복지, 실업과 고용, 금융수용성과 세금 등의 다양한 영역에 행동과학을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한 월드뱅크 산하에 있는 행동과학 팀 https://www.worldbank.org/en/programs/embed
National Social Norms Center (NSNC)	사회적 규범을 이용하여 음주 등의 건강과 관련한 대학내 문제 해결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Michigan 주립대학의 연구소 http://socialnorms.org
SPARQ	주로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와 행동과학적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do tank”로 Stanford 대학교 심리학과 소속의 연구소 https://sparq.stanford.edu

에서 매우 이질적이고 드문 경우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심리학의 응용을 모색하는 연구 조직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ideas42

ideas42(n.d.)는 비영리단체로서 정부 기관,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40여 개 국에 걸쳐 200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세계적인 규모의 행동과학 연구소이다.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뉴델리에 사무실 있으며,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행동과학을 접목하여 복잡한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작업을 해 오고 있다. ideas42에서는 미국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학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알림 정보를 보내는 단기 프로그램에서부터, 멕시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금 저축을 늘리지 않는 행동적 원인을 분석하고 연금 저축액을 늘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장기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과제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젝트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연구자와 정책 관련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B-hub(Behavioral Evidence Hub; www.bhub.org)를 구축하였다. B-hub는 ideas42 연구소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의 정보뿐만 아니라 행동과학을 바탕으로 한 모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설계에서부터 효과, 벤치마킹 시에 유의해야 할 가이드라인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을 고민하거나 성공적인 프로젝트 사례를 알리고 하는 연구자와 정책관련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정책 개발 사례

사회 규범의 원리를 적용한 물 부족 대응 정책 개발

코스타리카 벨른 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사회기반시설과 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ideas42와 세계은행이 이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ideas42, n.d.). 2014년 3월에 다양한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진행한 결과 물 부족이 중요한 문제이며 물 절약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인 수준에서 물 절약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는 책임 의식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행동변화의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수도세 고지서를 통해 이웃과의 물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물 사용량을 비교하자 3.75% ~ 5.6%의 사용량 감소를 보였고, 다음 달 물 사용량 목표를 물어보고 물 절약 관련 전략들을 알려 주는 엽서를 받은 경우에도 3.4% ~ 5.6%의 감소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는 행동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까운 이웃을 비교 기준으로 하여 암묵적인 사회의 압력을 느끼고 집단의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를 보였다. 이는 공공정책에 사회 규범에 대한 원리를 접목하여 자원 절약에 대한 실증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한 사례이다.

역할 모델을 통한 아이들의 가정 내 지지 환경 개선의 장기적 효과

니카라과 가족부에서는 Paris School of Economics의 Karen Macours와 함께 심각한 가뭄

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 가정을 위해 일 년 동안 현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World Bank, 2018).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 가정이 현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건강검진을 시키기, 장학금으로 직업 교육을 받기, 지원금으로 농업이 아닌 다른 일 찾기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가뭄이 극심한 기간 동안 현금 지원은 수혜가정 아동들의 영양 상태와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여성 혹은 지역사회 여성 리더와 상호작용을 한 수혜자들의 경우 프로그램이 중단된 2년 후에도 자녀의 학교 교육에 25% 더 많은 돈을 쓰며 아이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얻기를 기대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저소득 국가에서 실행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금전 지원이라는 단기적 개입에 역할 모델과의 교류와 같은 추가적인 전략을 고려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단기적 지원을 통해 미래에 대한 태도 변화라는 장기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책 사례이다.

도로 안전 계획의 목표 개선

자동차 충돌 사고로 사망이나 중상이 영국 평균보다 64% 높게 발생하고 있던 영국의 이스트 서섹스 카운티 의회는 BIT와 협력하여 데이터 과학 기법을 통해 10년 동안의 충돌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였다(The Behavioural Insights Team, 2017). 중대 사고들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직업운전자들이나 방문자들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위험 대처 반응이 느린

40-50대, 그리고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중대 사고를 더 많이 냈으며, 특히 이전에 과속 경력이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스트 서섹스 카운티 의회에서는 웨스트 미드랜드 경찰청과 손잡고 19주 동안 과속으로 검찰의 고시를 받은 15,346명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쉽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속도제한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범 가능성이 20% 감소되었는데, 이는 웨스트 미드랜드에서만 연간 150만 파운드의 형사사법 시스템 비용 절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접근법은 법의 강제성을 넘어서 타당한 이유를 들어 범법자들을 설득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공익적인 목적으로 넛지를 잘 활용한 사례에 수여하는 Nudge for Good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개인화된 알림 메시지를 사용한 납세율 제고 정책 개발

코소보는 가난한 유럽의 신생국가로 재정 정책의 안정화가 시급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세금에 의존하는 국가 재정의 비율이 85%로 매우 높아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코소보 국세청은 세계 은행과 독일 연구 기관인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GIZ)에 관련 정책의 개발을 의뢰하였다(Hernandez Ore, Karver, Negre Rossignoli, & Perng, 2019). 2018년에 우편,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세금 신고와 납부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는 실험적 정책을 실행한 결과 개인의 세금 신고를 59% 증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본 사례는 코소보와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 복잡한 기술이나

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효율적인 정책 개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동향

한국에서의 공공정책에 대한 행동과학적 연구의 현황

한국에서 행동과학이 공공정책의 수립을 위해 사용되어 온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 방향에서 조사를 하였다. 먼저 한국 대학 소속의 심리학 연구소들 중에 사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의 활동을 확인하는 한편 행동경제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어서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들과 심리학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문 분야에서의 행동경제학 관련 연구들을 검색하고 이 중 행동경제학을 공공정책과 연결짓는 연구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정책 연구들 중에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연구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모두 공공정책에 직접 함의를 갖는 연구 기관이나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연구에 대한 소개보다는 한국에서의 연구 동향을 개관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 내용을 소개한다.

심리학 및 행동경제학 연구소

한국 대학의 심리학과 산하 연구소들은 주로 세미나, 컬러퀴엄 등의 순수 학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와 공공정책에의

활용에 관련한 연구와 활동을 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사회심리학적 접근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n.d.)이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는 201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종단 연구를 통해 행복 연구의 이론을 구축하고 초중등교육부터 전 생애 교육까지 행복 연구의 결과를 행복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조직은 매우 드물지만 그 중 한 곳으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행동실험 연구센터가 있다(n.d.). 이 곳은 2013년에 설립된 곳으로서 행동 및 실험경제학 분야의 연구들을 수행하는 한편 국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또 다른 곳으로는 최근에 설립된 사설 연구소인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행동경제학을 공공정책에 적용하는 주제로 2018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매일경제, 2018. 8. 21), 아직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동경제학을 한국에 소개하고 넛지 전략을 사용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행동경제학 관련 학술 연구

국내에서 진행된 행동경제학 관련 학술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검색을 실시하였다. 인간의 판단과 결정을 공공정책의 계획에 적용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발표한 해외 연구 사례와 정책 개발 연구소들은 주로 행동과학의 접목, 행동경제학적 접근법, 넛지 기법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행동과학’, ‘행동경제학’, ‘넛지’ 또는 ‘Thaler’를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먼저 심리학 내에서의 행동경제학 연구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학술검

색 엔진인 DBpia를 통해 검색어로 관련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수백 건의 연구가 검색되었으나 논문의 제목에 해당 검색어를 언급하고 있는 연구는 ‘행동과학’ 6건, ‘행동경제학’ 3건이었다. 이 중 심리학 및 행동과학 민간전문가를 국내 사법시스템에 활용하는 정책적 제언 연구가 1건 있었으나(윤민우, 이수정, 최혜림, 2011) 이는 공공정책을 개발하는 연구라고 볼 수 없었다. ‘넛지’ 혹은 ‘Thaler’를 검색어로 조사한 결과는 61건이었는데, 조사된 연구들은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 관련 연구가 30건, 학술대회 자료 14건, 나머지 한국심리학회 분과 별(문화 및 사회문제, 발달, 법정, 사회 및 성격, 산업 및 조직, 인지 및 생물, 일반,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로 각각 1-4 건씩으로 의사결정에 대해 Thaler의 다양한 이론들을 참고로 한 연구들이었다. 심리학 내에서도 행동경제학 개념을 언급하고 심적 회계, 소유 효과 등 의사결정에 관련된 이론을 이용한 연구들이 조사되었으나 행동과학을 공공정책에 적용하는 연구 사례는 조사되지 않았다. 이 밖에 조세 등의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비합리성과 편향을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예: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2013). 이러한 연구들은 이 논문에서의 1차적인 관심사인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아니지만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행동과학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심리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 분야의 행동경제학 연구들을 찾아보기 위해 구글 학술검색, KCI 등의 학술검색 엔진에서 ‘행동과학’, ‘행동경제학’, ‘넛지’를 논문의 검색어로 조사하였다. 구글 학술검색에서는 84건, KCI에서는 73건이 조사되었고, 조사된 연구들의 학

문 분야는 경제, 경영, 정책, 커뮤니케이션 등의 행동경제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예상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예술, 복식 등의 분야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 10건의 연구가 조사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미술과 넛지 기법을 이용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심영옥, 최은빛, 2019), 기부 행위와 같은 도덕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에의 넛지 활용 방안(문경호, 2018) 등 넛지 기법을 교육 현장에 접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윤아영, 박영주, 2018; 이현경, 강운정, 2019; 한진수, 2015; 허윤희, 2019). 디자인 분야에서도 넛지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7건의 연구가 조사되었다. 특히 환경이나 사물의 디자인을 통해 넛지 효과를 유도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으로(김응화, 2018; 박영원, 이혜수, 2019; 박지혜, 주재우, 2018; 최선영, 고정욱, 이보배, 2015) 예를 들어 주차 구획에 대한 디자인을 통해 문콕 사고를 예방하거나(박규영, 최영신, 2018)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을 통해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청결 습관을 갖도록 하는 등의 연구가 있다(최수영, 김보연, 2015). 한편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법 분야에도 접목되어 ‘행동법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사된 7건의 관련 연구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법적 판단의 주체들과 입법자들이 사법제도를 통한 정의실현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행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편향과 비합리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함을 제안하거나(조성혜, 2007), 법적 판단의 대상인 범죄 행동이나(홍승희, 2019) 법적 분쟁의 조정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개별행위자의 비합리성이라는 행동경

제학적 개념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학수, 2011; 한상훈, 2013; 홍승희, 2019). 그 외에도 친환경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심리학적 변수들을 살펴보고 행동경제학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한 환경 분야의 연구가 있었으며(김태형, 천승환, 김수, 김주리, 이지원, 2018), 인문학 분야에서 고전소설의 등장인물이 보여준 이타성을 행동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정보미, 김중철, 2017). 이와 같은 현황을 보면 행동경제학의 관점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미 상당히 친숙하게 받아들여지고 각 학문 분야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모두 공공정책에 대한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학계 전반에 걸쳐서 행동경제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학문적인 맥락에서는 행동과학적인 인간관과 연구 방법론이 수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행동경제학과 공공정책이 보다 직접 접목된 연구들은 주로 행정과 정책 분야에서 조사되었으며 원자력에너지 정책(강은숙, 김종석, 2014)에서부터 공동체 의식의 강화(이현경, 강운정, 2019), 외국어고 정책(정제영, 이희숙, 2011)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행동경제학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정책에 행동경제학을 접목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효과성과 정책적 함의를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었는데, 그 중 한 예는 상주시 광골마을에서 실시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정책으로 저자들은 지자체에서 진행된 넛지 사례의 소개에 더하여 넛지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한계와 제언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정책 사례를 보고하였다(김

유라, 김광석, 김민주, 2016). 아쉬운 점은 실질적인 정책 사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행동경제학 접목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김이수, 2019) 이론적인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시라, 김은미, 2017; 박현주, 2017). 몇몇 연구들은 기존 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자의 태도나 정책의 기반을 설명하는 데 있어 행동경제학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신용덕, 김진영, 2013; 황교근, 2010) 그 개념에 대한 정의와 이론적 접근이 정확치 않은 연구들도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행정 분야에서는 행동경제학이 공공정책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효성에 대한 고찰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적 접목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대해서 앞으로 심리학 분야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다.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의 연구의 전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공공정책의 맥락에서 행동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이다. 셉테드는 Jeffery(1971)의 저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의 약자에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건축물을 포함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의 기법과 제도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죄 예방 기법’으로서 환경 설계에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까지 유럽,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셉테드 관련 연구와 정책적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박현호, 2006), 한국에서는 2005년에 경찰청에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방안’을 발표한 후 국토교통부와 여러 지방자치단

체들도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제정하며 셉테드 기법을 정책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셉테드학회가 창립되어 건축학, 범죄학, 도시공학, 디자인, 경찰학 등 관련 학문 간의 연구 교류를 통한 학술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행정기관들과의 MOU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대한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셉테드는 폭력과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행동과 환경의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환경의 설계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공정책에 행동과학적인 요소를 접목한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심리학, 행동경제학 관련 정책 연구

다음으로는 정책 연구에 심리학 또는 행동경제학이 직접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정책 연구 과제들을 조사하였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기관 17개와 교육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61개, 총 78개의 기관에서 진행한 정책 연구 중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 기술 등의 15개 주제 별로 '심리, 사회심리, 행동과학, 행동경제학, 넛지'를 주요어로 국내 정책 연구 정보시스템인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PRISM)'에서 조사하였다. '심리, 사회심리'를 주요어로 하여 9개의 주제에서 총 47건의 연구 과제(공공질서 및 안전 24건, 과학기술 1건, 교육 2건, 국방 1건, 농림해양수산 1건, 문화체육관광 1건, 보건 4건, 사회복지 9건, 통일외교 4건)가 검색되었고, '행동과학, 행동경제학, 넛지'를 주요어로 한 연구 과제는 검색되지 않았다(표 1). '심리, 사회심리'를 주요어로 검색된 정책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 치료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 심리 검사의 개발, 심리 관리 시스템의 구

축 등 공공 영역에서의 심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었으며, 공공 분야에 심리학적 접근을 접목하여 정책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

정책적 사안에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매우 드문 사례로 산림청의 소각 산불 예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과제가 있었다(산림청, 2013). 해당 과제에서는 산불 예방에 대한 단순한 의식 조사에서 벗어나,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농산촌 주민의 소각 산불 관련 태도가 규범 민감성, 대안 접근성, 소각 효과성, 대처 효능감, 처벌 민감성 등 다차원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과 각 마을의 규범, 환경적 특성에 따른 복합적 영향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 정책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산불 유발행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는 데 있어 비합리적 신념과 외적 귀인 편향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초적 탐색 연구로서 실질적인 캠페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 사안에 대한 문제 진단에 심리학 접근을 사용한 선도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행동과학적 접근이 공공정책에 사용되고 있는 사례

공공정책에 행동과학적인 접근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는 이른바 증거 기반 정책, 즉 정책의 타당성을 정책 입안자의 임의적 판단이나 이론이 아닌 경험적인 증거에 기초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이 실제

로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인간의 행동을 포함한 복잡한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실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해 보아야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심리학에서의 실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정책에 전략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증거 기반 정책은 지식은 반드시 현실을 관찰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심리학의 경험주의 철학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보다 직접적으로 행동경제학의 인간관에 기반을 둔 행동 변화 전략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행동경제학의 주요 가정, 즉 인간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합리적이라는 생각(bounded rationality; Simon, 1982)에 따라 인간의 오류와 편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오류와 편향을 역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넛지 기법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접근법으로, 넛지는 특정한 이론에 바탕을 두지 않고 간단한 환경 디자인으로 행동 변화를 꾀하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부터 행동경제학에서 발견된 법칙에 따라 정교하게 전략을 설계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한국의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동경제학적인 접근을 도입한 예는 많지는 않지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증거 기반 정책의 예로는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실시한 청년수당 정책의 실험이 있다(내 손안에 서울, 2018. 2. 28). 이 정책은 실업 문제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서 일정한 기준으로 선발된 사람들에게 6개월까지 월 50만 원의 취업 및 창업 활동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참고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이 정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취업, 창업률 증가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이현우, 이지호, 서복경, 2016). 이러한 효과 검증이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으나, 이 정책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청년수당 정책은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나아가 기본소득의 형태로 발전시켜서 그 효과를 실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내 손안에 서울, 2018. 3. 16).

다음으로 넛지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경우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일찍이 환경부(2010)에서 대국민 환경 분야 넛지 공모전을 실시한 것이나 경기도(2018)에서 “넛지 효과를 활용해 국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공공디자인” 공모를 한 것, 한국도로공사(2019)에서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공모를 한 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행동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도 비교적 쉽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보다 더 전문적인 수준에서 행동경제학을 정책에 적용한 경우로서 2018년에 서울시 산하의 연구소인 서울연구원에서 “행동경제학 실험을 통한 서울시 정책 개선 또는 도출 연구” 과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것은 환경, 에너지, 경제, 복지 등의 정책을 설계하거나 발굴하는 용역 과제에 전문가를 모집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외국에서와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내에 넛지 유닛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넛지 전략을 개발하거나 기타 행동경제학을 직접 공

공정책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외부 용역을 주거나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말에 2018년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행동경제학을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머니투데이, 2017. 12. 27; 한겨레, 2018. 5. 29). 구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넛지 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일을 하고, 정책의 도입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폴리시 랩을 운영해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선도적인 사례들을 본받아 행동경제학의 사상과 방법론을 모두 정책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행동과학의 미흡한 보급의 원인에 대한 고찰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공공정책에 있어 행동과학이 기여하는 바가 그 가능성에 비해 아직 매우 적다. 심리학의 경우에는 외국도 사정이 그리 다르지 않지만, 왜 행동경제학조차도 한국에서는 정책에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행동과학(특히 그 일부인 심리학)이 사회적으로 더 쓸모가 있는 학문이 되도록 하는 데 실마리를 줄 것이다. 이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고 정답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볼 수는 있다.

먼저 넛지 접근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의 주장(Hausman & Welch, 2010)처럼 한국 국민들이 넛지를 국가가 개인의 선택에 간섭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부정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적인 접근 자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태

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Sunstein, Reisch, 그리고 Rauber(2017)가 여덟 개의 주요 국가에서 넛지 접근을 사용한 전략들(예: “대형 식료품점에서는 가장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법을 정한다.”)에 대한 태도를 물었는데, 한국 참가자들은 중국 참가자들과 더불어 넛지 전략들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에서 실제로 넛지 전략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조사 당시는 특히 박근혜 정부 말기에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하던 시기였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어쨌든 이 정도로 국민들이 넛지 접근에 기초한 정책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정책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 탓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학계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그리고 행정가들은 행동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의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행동경제학의 경우에는 한국에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의 수가 적어서(예: Choi, Guerra, & Kim, 2019) 응용 연구의 동력을 얻기 위한 학계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심리학은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복잡한 현실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기보다는 통제된 실험실에서의 현상의 탐구를 더 편안하게 생각해왔을 수 있다(Brown, de Visser, Dittmar, Drury, Farsides, Jessop, & Sparks, 2012). 미국에서는 심리학의 전반적인 문화가 순수 학문을 지향해왔으며, 비교적 최근에야 현실 문제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발견을 비전공자의 언어로 번역

하는 데 학계 차원의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Kaslow, 2015). 미국 심리학으로부터 학문적인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의 심리학계도 그런 경향을 그대로 따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연구자는 그런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고, 복잡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모호하고 일견 무질서해 보이는 사회 현상에 대해 과감히 발언하고 개입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그런 일에 무관심하게 될 수 있다 (Amir et al., 2005). 이는 일반인들에게 심리학이 현실과 유리되고 현실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얻기 힘든 학문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정책 입안자들 또한 공공영역에서의 심리학의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심리학자들과의 협업 가능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한 원인으로 한국의 공공정책 영역의 문화가 행동과학적인 접근과 잘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Strassheim et al.(2015)은 영국에서 행동경제학이 적절한 시기에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공공정책에 뿌리를 내리게 된 현상을 분석하면서, 왜 독일이 영국에 비해 행동경제학의 공공정책에의 적용이 훨씬 더딘지를 논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공정책의 배경이 되는 지식의 타당성이 어떻게 부여되는가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culture of expertise)에서의 양국 간 차이를 특히 주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공공 복리를 위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있어야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권위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독일에서는 시민이 사회 전체라는 유기체의 일부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나 정부 기관이 보다 자연스럽게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영국의 경험주의적인 철학적 전통, 실용적인 관리

자를 지향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 국민에게 감시를 받아야 하는 행정의 문화 등이 행동경제학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법과 잘 부합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잘 수용이 되었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독일에서는 아직까지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공정책에 행동과학의 도입이 느린 것에 한국의 관료주의의 어떤 특성이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공공정책에 관련된 문화가 행동과학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Strassheim 등(2015)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리학의 공공정책에의 기여 확대를 위한 제언

공공정책에서의 행동경제학의 유행과 심리학 도입의 필요성

넛지 접근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 접근이 가진 강력한 설명력이나 공공정책의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용이한 특성도 그 원인이 되겠지만,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 모두에서 단순하고 간결하다는 점 때문에 수용과 도입이 쉬운 탓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물론 넛지는 공공정책의 만병 통치약이 아니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도 많이 있다.

넛지 접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단과 의사 결정이라는 심리 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많은 경우 관심사는 한 개인이 당면한 문제(흔히 선택지가 주어지는)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제시해야 바람직한 쪽으로 판단을 하도

록 만들 수 있는가이다(Selinger & Whyte, 2011). 하지만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이런 형태로 요약할 수 있는 것만 있지 않다(Burgess, 2012). 예를 들어 성격, 동기, 태도 등에서의 개인차의 영향이라든가, 생리, 지각 등 저수준의 심리학적 현상들,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른 변화, 성별, 인종, 문화 등 각종 집단 고유의 특징, 그리고 암묵적, 자동적인 심리 과정, 개인 간 상호작용, 집단 역학, 집단 간 관계 등은 행동경제학보다는 심리학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들이며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 심리의 측면들이 결부된 사회 문제들은 행동경제학의 이론들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어려우며 심리학의 다양한 관점들을 동원해야 보다 완전한 이해와 함께 해결책의 모색이 가능하다(Frain & Tame, 2017, July 4).

Mols 등(2015)은 넛지 기법의 한계와 이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심리학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넛지를 통해 숙고의 과정 없이 프레이밍(framing)된 행동은 효과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에서 유도하는 행동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심리학의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 Turner, 1979)과 사회적 영향(Turner, 1991)의 개념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정체성은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기 개념으로 정의된다. 새로운 규범이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인식되면, 그러한 사회의 공유된 규범에 맞춰 새로운 자기개념이 형성되고 관련된 행동이 내재화되기 쉬워진다. 다시 말해, 정책이 유도하는 행동을 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인지하게 하는 사고 과정을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시켜 정책에서 원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Mols 등(2015)은 정책 입안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변화된 행동을 유도하는 넛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 의도한 행동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기법으로 사회적 규범을 이용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 예로 2006년 호주의 사례에 따르면, 남동쪽 퀸즈랜드 지역에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물 사용량을 하루 180리터에서 140리터로 낮추자는 'Target 140'이라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착한 퀸즈랜드 사람들은 물을 현명하게 쓴다'는 캠페인이 시작되자 이 지역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인 '물을 적게 사용하는 좋은 퀸즈랜드 사람'의 모습에 부합하도록 물 사용량을 줄였으며, 그러한 행동은 가뭄 사태가 끝난 후에도 꾸준히 유지되는 효과를 보였다(Walton & Hume, 2011). 이 외에도 사회정체성을 이용한 사례로는 햇볕이 강한 호주의 국민이라면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셔츠, 모자의 착용과 자외선차단제의 사용을 잘 해야한다는 'Slip-slop-slap'과 'Sun-Smart'(Montague, Borland & Sinclair, 2001), 그리고 진정한 이 지역의 사람이라면 고속도로에서의 쓰레기투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캠페인으로 지역정체성을 강조한 "Don't mess with Texas"와 "Don't lay that trash on Oklahoma"가 있다(Grasmick, Bursik Jr., & Kinsey, 1991). 이와 같이 사회적 자기개념의 인식을 통해 정책이 유도하는 행동이 내재화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공공캠페인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유용한 정책 기법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은 판단 및 의사결정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는 심리학과 행동경제학 양쪽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양쪽의 전문가들 간의 협업이 요구될 것이다.

행동경제학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공공정책의 설계에 심리학이 더 많이 활용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심리학이 행동경제학과 경쟁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두 학문은 서로 전통과 주된 관심사, 적용 범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두 학문적인 접근 방법들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면 다양한 관점을 통해 해결 방법들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두 관점을 한 자리에 모으려고 한 노력의 훌륭한 예로 Keller-Allen & Li, 2013이나 Shafir, 2013을 볼 것). 아울러 이 두 학문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행동경제학에 의해 공공정책에서의 행동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이용해서 심리학이 공공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이 공공정책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하려면,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행정가들과 나아가 그 정책들의 수혜자가 될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 심리학이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질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동경제학이 공공정책에 도입되었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공공정책에서 행동경제학의 관심이 폭발이 되었던 계기는 책 『넛지』의 출판이었다. Thaler와 Sunstein(2008)은 nudge라는 한 단어에 ‘인간에 대한 종래의 가정과는 다른 관점에 바탕을 둔 ‘전혀 새로운 행동 유도 전략이라는 의미를 함축하여 사용함으로써

행동경제학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이 개념을 소개할 수 있었으며, 그럼으로써 이것이 공공정책에 있어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접근’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 밖에 선택 설계자라든가 Kahneman(2011)의 System I, System II 사고와 같은 용어도 개념 자체는 새롭게 없을지라도 대중들에게는 어렵지 않으면서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어였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이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데 일조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물론 Kahneman이나 Thaler 등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도 이 새로운 접근법에 학문적인 권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앞으로 심리학자들도 비전문가들, 특히 정책을 다루는 행정가들에게 심리학이 더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 심리학이 공공정책에 더 많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고찰해보았다.

소통: 행동과학적 접근에 대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

Dovidio와 Esses(2007)는 심리학이 대중에게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원인을 네 가지 꼽고 있다. 그것은 1) 외적 타당도를 희생해 가면서 지나치게 내적 타당도를 추구하는 경향, 2) 지식의 파편화, 탈맥락화(미시적 현상에의 천착), 3) 기초 과학, 그리고 출판의 수에 집착하는 대학 시스템, 4) 심리학 연구에서의 발견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이 경향들은 모두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구조적, 문화적 특성들로서 개선하기가 쉽지 않지만, 심리학이 공공정책의 문

제들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심리학의 사회적 위치를 재정립하는 데에는 미국 심리학계의 노력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서,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학술지에서는 2015년 10권 6호 특별호에서 심리학자들에게 원고 모집을 하면서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해결책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메모의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Teachman, Norton, & Spellman, 2015). 그 밖에도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에서는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라는 학술지를 2000년부터 발행하면서 공공 복리에 직접 함의를 갖는 심리학 연구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행동과학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점차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조언을 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는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초기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심리학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이론과 방법론의 유용성을 보여줄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행동경제학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많은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례에는 *Save more tomorrow*가 있다. 이것은 Thaler와 Benartzi(2004)가 개발한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 연금 프로그램으로서, 퇴직 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망설이고 미루다가 퇴직 후 경제적 곤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미루기, 현상 편향(status quo bias), 손실 회피, 자기 통제의 실패 등의 오류에 대

한 대응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인간의 비합리성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보여 주기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현장 실험으로 그 효과도 검증되었으므로 비전문가들에게도 그 결과에 대한 강한 신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서의 심리학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 연구자들과 일선 행정가들을 훈련할 프로그램의 개발

심리학이 공공정책에 이용되려면 첫째, 실제 공공정책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들을 양성해야 하며, 둘째로 이러한 연구의 1차 소비자이자 연구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주체인 행정가들을 교육해야 한다. 먼저 연구자 양성의 측면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기존의 이론 지향적인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응용성과 현장성이 강한 교육 및 연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이해, 또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실험 방법론에 있어서 이미 강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더해 정책 개발과 이를 위한 심리학 이론의 응용을 훈련함으로써, 각 심리학 하위 전공 분야의 연구자들이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론들을 적절히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는 현장 경험을 대학원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대학원 과정에서 인턴 등의 형식으로 실제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Behavioral Insights Group

과 같은 예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한편 협업의 또 다른 주체가 될 공무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워크샵,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서 행동과학적인 접근에 대해 현장에 있는 행정가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하는 행동과학의 주요 이론들, 무선화된 통제 시행(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 Haynes, Service, Goldacre, & Torgerson, 2012)을 비롯한 연구 방법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적용 방법, 그리고 정책 효과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자료 분석과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연구자와 행정가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정책 개발을 위해 협업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연구 기관과 현장의 연결: 이미 개발된 사례들을 적절히 적용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회 장면에서의 요구를 해결

공공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외국에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사한 문제에 대해 이미 경험적으로 검증된 해결 전략을 찾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면 심리학적인 접근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B-hub와 같이 전략들을 수집,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웹사이트가 있지만 비전공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한국어로 옮길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앞으로 한국 내의 심

리학을 적용한 정책 개발의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사례들을 수집, 정리하여 국제적인 매체 등에 발표를 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행동과학의 전문 지식이 당면한 문제에 적절히 잘 활용되도록 하려면 해당 문제와 전문가 사이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웹사이트 등에 공공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의 전문 분야를 정리, 게시함으로써 정책 결정 주체와 행동과학자의 연결(matchmaking)을 장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동과학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행정 현장과 적합한 연구자를 연결함으로써 각 심리학 하위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들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투입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와 행정가의 협업에 대해 Bhanot, Chainani, 그리고 Huang(2018, March 13)은 시 정부와 지역의 학자들이 협업을 했던 경험에 기반하여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자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지식을 생성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행정가는 중요한 정책적 질문에 답을 얻는 것에 더 초점을 두므로, 양쪽이 협력을 하는 것의 성격을 잘 정의함으로써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 균형을 적절히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자칫 소홀할 수 있지만 행정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비용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또한 소통에 있어서 연구자는 연구 내용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 전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비전공자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연구: 응용적 연구 기반의 강화

심리학이 현실 사회와의 끈을 놓지 않으려면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뿐 아니라 응용 연구, 즉 심리학 원리들을 현실의 문제들에 적용해 보는 연구들이 더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학자로서 사회적인 필요에 부응한다는 사명감만으로 응용 연구를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응용 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자(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사적인 이익과도 부합해야 이런 연구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첫째, 응용 연구의 출판의 기회가 더 많아야 한다. 그래야 응용 연구를 하고자 하는 심리학자들이 자신의 연구가 학자에게 가장 유의미한 성과물인 논문의 형태로 결실을 맺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Cialdini(2009)는 상위권의 심리학 학술지에 현장 연구 논문을 출판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꼬집으면서, 그 결과 심리학자들이 현장 연구를 하려고 하지 않고, 심리학이 일반 대중,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과 점차 유리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기존의 학술지들이 응용 연구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행동과학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면 전용 학술지를 발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의 학술지들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표 2) 출판되는 연구의 영역을 심리학으로 제한하지 않고 행동경제학과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학술지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둘째, 공공정책 연구를 비롯한 응용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공

공정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본질적으로 현장 연구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대표성이 높은 일반인 표본을 필요로 하며, 실험실 실험에 비해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참가자를 더 많이 모집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개입 전략들을 시험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시험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여러 조합으로 처치를 하는 무선회된 통제 시행 방법(Haynes et al., 2012)을 써야 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한편 개입의 장기적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중단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려면 자연히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응용 연구, 특히 공공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에 특정된 연구 과제를 신설하여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셋째, 이 모든 면에서 응용 연구의 여건이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응용 연구에 대한 심리학계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론 연구를 응용 연구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Cialdini, 2009). 그렇기 때문에 응용 연구를 통해 공공 복리에 기여하고 싶은 연구자가 있더라도, 이런 응용 연구는 학계의 인정이라는 무형의 강화물뿐 아니라 출판과 취업 등 현실적인 성취를 거두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 응용 연구에 대한 동기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기술적인(descriptive) 규범은 이론 연구가 응용 연구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지시적인(prescriptive) 규범으로 변질될 수 있어(Eriksson, Strimling, & Coultas, 2015), 명시적인 교육이 없어도 그러한 풍조가 학문 후속 세대에게 재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계는 응용 연구가 이론 연구와는 조금

표 2. 공공정책과 행동과학을 주제로 한 연구들을 소개하는 해외학술지

학술지명	학술지 소개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사회경제적 정의, 사회문제, 이상적인 사회를 주제로 사회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과 정책적 이슈들과 관련하여 새롭게 출판된 책, 여러 미디어의 내용을 리뷰한 논문들을 소개하는 학술지 https://www.spssi.org/index.cfm?fuseaction=page.viewpage&pageid=478
Behavioural Public Policy	행동연구와 관련 공공정책을 소개하는 학제적이고 국제적인 학술지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behavioural-public-policy
Behavioral Science and Policy	공익에 기여하는 행동과학연구들을 실행 가능한 정책에 적용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학술지 https://behavioralpolicy.org/publications
Journal of Behavioral Public Administration	공공 행정에 대한 행동적, 실험적 연구를 주제로 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들을 소개하는 학술지 http://journal-bpa.org/index.php/jbpa
Policy Insights from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임상과학, 교육연구, 인지심리학, 사회및성격심리학에 분야에서 행동 및 뇌과학을 기반으로 정책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과학적 리뷰 연구들을 소개하는 학술지 https://fabbs.org/pibbs-journal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공공의 이슈에 관심과 초점을 둔 연구들을 소개하는 학술지 https://journals.sagepub.com/home/psi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사회문제와 공공정책의 이해에 직접 관련된 연구주제 및 프로그램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리뷰를 통해 소개하는 학술지 https://www.spssi.org/index.cfm?fuseaction=page.viewpage&pageid=952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며, 응용 연구의 가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특성을 모두 지닌 학문으로서(Myers & DeWall, 2015) 심리학은 순수 학문이면서 동시에 응용성이 강한 학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따라서 심리학은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론을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공정책의 수립에 개입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외국에서 모두 심리학의 공공정책에 대한 기여가 다소 미흡했는데 이는 학계의 노력 부족 등의 내적인 원

인과 사회적 인식 등 외적인 원인 모두의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외국에서는 행동경제학과 넛지 접근이 정책적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일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심리학이 공공정책의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일 수도 있다. 즉, 행동경제학이 외국에서 공공정책에 적용되어 온 모범적인 사례들과 그 성공의 원인을 잘 분석한다면 한국에서 심리학을 가지고 이와 유사한 성공 사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공정책에 심리학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심리학의 잠재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사기업을 비롯한 다른 사회 영역에서도 심리학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숙, 김종석 (2014).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고려와 공공정책에의 함의: 원자력에너지정책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적용. 한국행정논집, 26(2), 191-216.
- 고학수 (2011). 행동법경제학의 지평. 법경제학연구, 8(1), 3-23.
- 김시라, 김은미 (2017). 우리나라 FTA 정책활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넛지기법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18(4), 119-140.
- 김유라, 김광석, 김민주 (2016). 마을자치 사업에서 농촌현장포럼의 넛지 효과 분석. 한국행정연구, 25(1), 25-47.
- 김응화 (2018). 패키지디자인의 넛지 활용 연구-‘재미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2), 131-143.
- 김이수 (2019). 촉매적 정책도구로서 넛지의 정책학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3(3), 157-178.
- 김태형, 천승환, 김 수, 김주리, 이지원 (2018).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친환경 행동 활성화 잠재성 검토: 행동경제학, 인구사회학, 환경심리학 변수의 비교. 환경정책, 26(2), 71-98.
- 내 손안에 서울 (2018. 2. 28). [카드뉴스] “청년수당은 처음이라”...청년수당 Q&A.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42057>에서 2019. 10. 26 자료 얻음.
- 내 손안에 서울 (2018. 3. 16). 전국으로 확대되는 ‘서울시 청년수당’. mediahub.seoul.go.kr/archives/1144946에서 2019. 10. 26 자료 얻음.
- 디자인 경기 (2018). 2018. 3. 6 도, 넛지 이론 접목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http://design.gg.go.kr/design_feel/notice/notice_view2.jsp?_idx=1207에서 2019. 10. 26 자료 얻음.
- 매일경제 (2018. 8. 21). 행동경제학연구 정책 혁신 토론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8/525355>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머니투데이 (2017. 12. 27). 슬쩍 찌르는 ‘넛지 정책’ 발굴... 정책 효과 높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122623581888806>에서 2019. 10. 26 자료 얻음.
- 문경호 (2018). 도덕교육에서 넛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교원교육, 34(4), 193-215.
- 박규영, 최영신 (2018). 넛지 개념을 도입한 바른 주차 유도 주차구획 디자인. 교통기술

- 과정책, 15(4), 47-56.
- 박영원, 이해수 (2019). 커뮤니케이션디자인에서의 넛지 효과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영상문화*, 34, 77-100.
- 박지혜, 주재우 (2018). 인공지능 스피커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높이는 행동경제학 기법: 의인화. *디자인융복합연구*, 17(3), 41-53.
- 박현주 (2017). 쓰레기 불법투기 인식 유형과 넛지(nudge): 대구시 달서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2), 61-83.
- 박현호 (2006).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의 제도적 고찰. *한국경찰연구학회*, 5(2), 113-160.
- 산림청 (2013).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소각산불 예방방안 연구.
- 서강대학교 행동실험 연구센터 (n.d.). http://econ.sogang.ac.kr/econ/econ06_3_5_1.html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n.d.). <http://happinessclass.snu.ac.kr/Main.aspx>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신용덕, 김진영 (2013). 행동경제학의 이야기 짓기 관점에서 살펴 본 정책사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4), 163-192.
- 심영옥, 최은빛 (2019).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넛지디자인 지도 방안: 범교과 융합 미술 교육을 중심으로. *조형교육*, 71, 117-141.
- 윤민우, 이수정, 최혜림 (2011).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의 심리학 및 행동과학 분야 민간전문가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미국의 민간전문가 활용 예시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37-153.
- 윤아영, 박영주 (2018). 음악교육에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과 넛지(Nudge)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1191-1210.
-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2013). 남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조세 공정성 지각에서 사회 비교 정보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193-207.
- 이현경, 강운정 (2019). 사회참여미술로서의 넛지(Nudge) 디자인 수업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미술교육논총*, 33(2), 121-146.
-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 (201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 정보미, 김종철 (2017). '이타적 인간'에 대한 문학과 경제의 융합교육-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창선감의록>의 '화진'. *새국어교육*, 111, 186-217.
- 정제영, 이희숙 (2011). '넛지(Nudge) 전략을 활용한 외국어고 정책'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227-249.
- 조성혜 (2007). 합리적 선택이론과 행동법경제학. *법철학연구*, 10(1), 195-232.
- 최선영, 고정욱, 이보배 (2015). 넛지의 활용성 분석을 통한 휴지케이스 디자인. *산업디자인학연구*, 9(2), 107-118.
- 최수영, 김보연 (2015). 넛지를 이용한 유아청결습관 개선의 교구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3), 227-235.
- 한겨레 (2018. 5. 29). 기본소득 효과 못 믿나요? '정책실험' 통해 검증합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6652.html>에서 2019. 10. 26 자료 얻음.
- 한국도로공사 (2019). 제8회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http://www.ex-contest.co.kr/sub1>.

- htm에서 2019. 10. 26 자료 얻음.
-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19).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발간 및 운영세칙.
-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3).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심사규정.
- 한상훈 (2013).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형사정책연구*, 24(1), 39-78.
- 한진수 (2015). 네티지를 이용해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 경제 내용 융합하기. *시민교육연구*, 47(1), 247-271. doi:10.35557/trce.47.1.201503.009
- 허윤희 (2019). 네티지의 도덕과 교육에의 함의와 활용 방안: 환경윤리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64, 217-240. doi:10.18338/kojmee.2019..64.217
- 홍승희 (2019).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조정제도의 방향성. *피해자학연구*, 27(1), 191-218.
- 환경부 (2010). 대국민 환경분야 네티지 공모전 우수과제 자료집 발간.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74060>에서 2019. 10. 26 자료 얻음.
- 황교근 (2010). 한반도 비핵화 대안: 네티지전략 (Nudge Strategy)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61, 299-314.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d.). *Guidance for translational abstracts and public significance statements*. <https://www.apa.org/pubs/journals/resources/translational-messages>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Amir, O., Ariely, D., Cooke, A., Dunning, D., Epley, N., Gneezy, U., ... Silva, J. (2005). Psychology, behavioral economics, and public policy. *Marketing Letters*, 16(3-4), 443 - 454. <https://doi.org/10.1007/s11002-005-5904-2>
- Behavioural Economics Team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n.d.). <https://behaviouraleconomics.pmc.gov.au/>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Behavioral Insights (n.d.). <http://www.oecd.org/gov/regulatory-policy/behavioural-insights.htm>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Behavioural Insights Team (n.d.). <https://www.bi.team/>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Behavioural Insights Team (2017). *Update Report 2016-17*.
- Behavioral Scientist (2018, September 4). *Nudge turns 10: A special issue on behavioral science in public policy*. <https://behavioralscientist.org/nudge-turns-10-a-special-issue-on-behavioral-science-in-public-policy/>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Bhanot, S., Chainani, A., & Huang, Y. (2018, March 13). Lessons from building a behavioral science initiative in city government. *Behavioral Scientist*. <https://behavioralscientist.org/lessons-from-building-a-behavioral-science-initiative-in-city-government>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Brown, R., de Visser, R., Dittmar, H., Drury, J., Farsides, T., Jessop, D., & Sparks, P. (2011). Social psychology and policymaking: Past neglect, future promise. *Public Policy Research*, 18(4), 227-234.
- Burgess, A. (2012). ‘Nudging’ healthy lifestyles: The UK experiments with the behavioural alternative to regulation and the market.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3(1), 3-16. <https://doi.org/10.1017/S1867299X00001756>
- Cherry, K. (2019, August 28). Job outlook for

- psychologists. <https://www.verywellmind.com/job-outlook-for-psychologists-2794923>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Choi, S., Guerra, J.-A., & Kim, J. (2019). Interdependent value auctions with insider information: Theory and experiment. *Games and Economic Behavior*, 117, 218-237. <https://doi.org/10.1016/j.geb.2019.06.007>
- Cialdini, R. B. (2009). We have to break up.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1), 5-6. <https://doi.org/10.1111/j.1745-6924.2009.01091.x>
- Dovidio, J. F., & Esses, V. M. (2007). Psychological research and public policy: Bridging the gap.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1(1), 5-14. <https://doi.org/10.1111/j.1751-2409.2007.00002.x>
- Eriksson, K., Strimling, P., & Coultas, J. C. (2015).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29, 59-69. <https://doi.org/10.1016/j.obhdp.2014.09.011>
- Frain, A., & Tame, R. (2017, July 4). Government behavioural economics 'nudge unit' needs a shove in a new direction.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government-behavioural-economics-nudge-unit-needs-a-shove-in-a-new-direction-80390>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Grasmick, H. G., Bursik Jr, R. J., & Kinsey, K. A. (1991). Shame and embarrassment as deterrents to non-compliance with the law: The case of an anti-littering campaign. *Environment and Behaviour*, 23(2), 223-251. <https://doi.org/10.1177/0013916591232006>
- Haynes, L., Service, O., Goldacre, B., & Torgerson, D. Cabinet Office, Behavioural Insights Team. (2012). *Test, learn, adapt: Developing public policy with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http://www.cabinetoffice.gov.uk/sites/default/files/resources/TLA-1906126.pdf>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Hausman, D. M., & Welch, B. (2010). Debate: To nudge or not to nudg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8(1), 123-136. <https://doi.org/10.1111/j.1467-9760.2009.00351.x>
- Hernandez Ore, M. A., Karver, J. G., Negre Rossignoli, M., Perng, J. T. T. (2019). Promoting tax compliance in Kosovo with behavioral insights (English). *eMBeD brief*. Washington, D.C. US: World Bank Group.
- ideas42 (n.d.). <https://www.ideas42.org/>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iNudgeyou (n.d.). <https://inudgeyou.com/>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Jeffery, C. R. (197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Beverly Hills, CA, US: Sage Publications.
- Kahneman, D. (2011). *Thinking, fast and slow*. New York, NY, US: Farrar, Straus and Giroux.
- Kaslow, N. J. (2015). Translating psychological science to the public. *American Psychologist*, 70(5), 361-371. <https://doi.org/10.1037/a0039448>
- Keller-Allen, C., & Li, R. M. (2013, May). Psychological science and behavioral economics in the service of public policy. In *Meeting Summary,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ational*

- Institute on aging, Washington, DC.*
- Kraft, M. E., & Furlong, S. R. (2018). *Public policy: Politics, analysis, and alternatives* (Sixth edition). Thousand Oaks, CA, US: CQ Press.
- Lewin, K. (1951).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Selected theoretical papers* (D. Cartwright, Ed.). New York, NY, US: Harper & Row.
- Madrian, B. C., & Shea, D. F. (2001). The power of suggestion: Inertia in 401(k) participation and savings behavior.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4), 1149-1187. <https://doi.org/10.1162/003355301753265543>
- Mind, Behavior, and Development (n.d.). <https://www.worldbank.org/en/programs/embed> 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Mols, F., Haslam, S. A., Jetten, J., & Steffens, N. K. (2015). Why a nudge is not enough: A social identity critique of governance by stealth.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4(1), 81-98. <https://doi.org/10.1111/1475-6765.12073>
- Montague, M., Borland, R., & Sinclair, C. (2001). Slip! Slop! Slap! and SunSmart, 1980-2000: Skin cancer control and 20 years of population-based campaigning. *Health Education and Behaviour*, 28(3), 241-252. <https://doi.org/10.1177/109019810102800304>
- Myers, D. G., & DeWall, C. N. (2015). 마이어스의 심리학 (신현정, 김비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Sanderson, I. (2002). Evaluation, policy learning and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Public Administration*, 80(1), 1-22. <https://doi.org/10.1111/1467-9299.00292>
- Selinger, E., & Whyte, K. (2011). Is there a right way to nudge? The practice and ethics of choice architecture. *Sociology Compass*, 5(10), 923-935. <https://doi.org/10.1111/j.1751-9020.2011.00413.x>
- Shafir, E. (Ed.). (2013). *The behavioral foundations of public policy*. Princeton, NJ, 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mon, H. A. (1982). *Models of bounded rationality*. Cambridge, MA: MIT Press.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Team (2017, January 20). <https://sbst.gov>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SPARQ (n.d.). <https://sparq.stanford.edu>에서 2019. 10. 29 자료 얻음.
- Strassheim, H., Jung, A., & Korinek, R.-L. (2015). Reframing expertise: The rise of behavioural insights and interventions in public policy. In A. B. Antal, M. Hutter, & D. Stark (Eds.), *Moments of valuation: Exploring sites of dissonance* (pp. 249-268).
- Sunstein, C. R., Reisch, L. A., & Rauber, J. (2017). Behavioral insights all over the world? Public attitudes toward nudging in a multi-country study. *SSRN Electronic Journal*. <https://doi.org/10.2139/ssrn.2921217>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Monterey, CA, US: Brooks/Cole.
- Teachman, B. A., Norton, M. I., & Spellman, B. A. (2015). Memos to the president from a "council of psychological science adviser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6), 697-700. <https://doi.org/10.1177/1745691615>

5605829

- Thaler, R. H. (2016).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박세연 역). 서울: 리더스북.
- Thaler, R. H., & Sunstein, C. R. (2008).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1st ed.). New Haven, CT, US: Yale University Press.
- Thaler, R. H., & Benartzi, S. (2004). Save more tomorrowTM: Using behavioral economics to increase employee sav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S1), S164-S187. <https://doi.org/10.1086/380085>
- Turner, J. C. (1991). *Social influence*. Milton Keynes, UK: Open University Press.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4157), 1124-1131. <https://doi.org/10.1126/science.185.4157.1124>
- Walton, A., & Hume, M. (2011). Creative positive habits in water conservation: The case of the Queensland Water Commission and the Target 140 campaign.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3), 215-224. <http://lps3.doi.org.libproxy.chungbuk.ac.kr/10.1002/nvsm.421>
- World Bank. (2018). Social multipliers at work: Improving children's outcomes through aspirations and role models (English). *eMBED brief*. Washington, D.C., US: World Bank Group.

1차원고접수 : 2019. 10. 31.

2차원고접수 : 2020. 01. 25.

최종게재결정 : 2020. 02. 04.

Employing Psychology in Developing and Applying Public Policy

Yeong Ock Park

Sang Hee Par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most psychological research has implications for real-life problems, it is still very rare in Korea for psychology to be directly applied to solving social problems. To address this issue, it would be helpful to examine how behavioral economics, which has recently gained much attention at home and abroad, is being used to solve social problems. With respect to studying human thinking and behavior, behavioral economics has a lot in common with psychology in the role they can play in the public sector, and can complement each other for the goal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y.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possibilities of applying psychology to solving social problems, especially public policy issues. First, we review how behavioral science, including behavioral economics and psychology, has been used in formulation of public policy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over the last decade and present major examples. Then we examine the situation in Korea whereby introduction of both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into public policy is slow, and contemplate on its causes. Lastly, we consider what our discipline needs to do to contribute to advancement of public welfare in Korean society. We expect that this article will stimulate discussion of those interested in solving social problems through psychology.

Key words : application, public policy, social problems, public administration, behavioral economics